

‘출처없는 여론조사’ 공방 가열

민주 광주시장 경선 강운태·이용섭측 유출 정동채 “출처 밝혀야”...선관위·경찰 조사

민주당 광주시장 경선 후보들의 여론조사를 둘러싼 공방이 첨박경이다. 서로 믿을 수 없는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며 의혹을 제기 한데 이어, 출처를 알 수 없는 이상한 여론조사까지 계속되고 있어 경찰과 선관위가 조사에 나섰다.

강운태 의원 측이 유출한 당원 여론조사 결과에 이어 이용섭 의원 측이 배포한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 결과가 문제의 발단이 됐다. 이 때문에 강 의원은 선관위 조사를 받고 있고, 이 의원 측도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됐다.

이 의원 측은 지난 21일 ‘민주당 후보 적합도’는 이용섭 선두, 민주당 후보 가능성은 강운태 앞서’라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자료 형식으로 배포했다. 또 여론조사기관이 광주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남녀 1천1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ARS) 결과였다.

이 여론조사는 ‘민주당 후보 적합도’에서는 이 의원이 강 의원을 근소한 차이로 우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민주당 후보 가능성’에 대해서는 강 의원이 이 의원에 비해 6% 포인트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지도에서는 강 의원이 선두, 정동채 예비후보가 2위, 이용섭 후보가 3위를 달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보도자료가 배포되자 강운태 의원과 정동채 전 장관 등 상대 후보들이 선거법 위반 혐의가 짙다며 문제를 삼고 나섰다.

선관위 신고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고, 선거법에 명시된 여론조사 의뢰기관 명시도 없이

이 후보 측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설문 내용으로 진행됐다는 것이다. 정동채 예비후보는 “이 의원 측이 지난 21일 배포한 여론조사 결과는 사전 선관위 신고나 조사의뢰 기관 등이 명시되지 않아 명백하게 선거법에 저촉된다”며 “여론조사 실시 업체는 의뢰자가 누구인지, 어떤 데이터를 갖고 여론조사를 실시했는지, 선관위에 신고했는지 등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후보는 또 “사료 공명선거 하자면서 무슨 출처도 없는 여론조사를 공개 하는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표하기도 했다.

강운태 의원 측도 “이 의원 측이 배포한 여론 조사는 질의나 응답 문항 자체가 불공정하고 작위적으로 설계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 측은 “모 언론사가 여론조사기관에 조사의뢰 실시한 것으로, 선관위에 의무 신고 대상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어 “여론조사 의뢰기관 명시도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여론조사결과 보도자료를 각 언론사에 보낸 뒤 별도로 ‘엠바코’ 요청 보도자료를 통해 의뢰기관인 언론사를 적시해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조사의뢰한 언론사는 이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지 않았다.

이에 앞서 지난 18일에는 강 의원이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과정에 ‘민주당 광주 우대당원 및 대의원 여론조사 결과’가 유출되면서 문제가 됐다.

이용섭 의원 측은 곧바로 보도자료를 내고 “강 의원이 기자회견 때 출처 불명의 ‘민주당

광주 우대당원 및 대의원 여론조사 결과’를 제시하면서 마치 민주당의 조사 결과인 것처럼 기자들에게 배포했다”며 “출처 불명의 당원 여론조사 결과가 마치 중앙당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인 것처럼 발한 것은 경선 질서를 깨뜨리는 처사이며 민주당의 개혁 공천에 찬물을 끼얹는 해당 행위”라고 강 의원을 공격했다.

정 후보 측도 공세에 가세했다. 정 후보는 “강 의원이 배포한 당원 여론조사 결과는 어떤 근거에서 비롯된 것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며 “민약 당의 조사가 임의로 유출된 것이라면 중앙당에서는 유출 경위와 책임에 대해 분명하게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강 의원 측은 “내부 참고용 자료를 기자회견 현장에 가져간 것이지, 외부에 발표한 것도 아니고 보도되지도 않아 공직선거법 상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과거 당원명부를 근거로 조사한 결과일 뿐이다”고 해명했다.

강 의원은 이 문제로 최근 선관위에서 조사를 받았다. 이 의원 측에 대한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22일 A씨 등이 ‘이 의원 측이 출처도 없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자료로 배포하고, 여론조사를 보도하기로 한 언론사가 기사화도 하지 않았다’며 수사의뢰를 해왔다”고 밝혔다. 사실상 고발이 된 셈이어서 경찰이 현재 여론조사기관 등을 상대로 사실관계 확인을 벌이는 등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또 몇몇 유권자가 “선관위에 신고도 되지 않았는데, 민주당 광주시장 후보 적합도를 묻는 출처 불명의 전화가 여러 차례 걸려왔다”고 신고함에 따라 이 부문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민주 광주 서구청장 예비후보 정책토론회



민주당 광주시당은 23일 서구 문화센터에서 당원과 주민 1천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광주 서구청장 예비후보 토론회를 열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허황된 공약” vs “불공정 행정”

전주언 청장-김선옥 후보 열띤 설전

민주당 광주시당이 23일 주최한 광주 서구청장 예비후보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전주언 서구청장과 김선옥 예비후보는 자심한 듯 열띤 공방전을 벌였다.

전 청장은 김 후보의 장밋빛 공약을 문제삼았고, 김 후보는 전 청장의 서구청 운영 과정의 불공정 행정에 대해 집중 공격을 했다. 이날 오후 서구 금호동 서구문화센터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는 두 후보와 당원 및 주민 등 1천여 명이 참여해 이들의 토론을 지켜봤다.

김 예비후보는 “행정의 달인이라는 전 후보의 수식어가 무색하게 서구청은 지난 2008년 감사원 감사에서 수십 건의 불공정 행정이 적발돼 국비와 시비까지 반납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이에 전 청장은 “구체적으로 몇 건이 적발됐는지 알 수 없지만 공직자들이 적극적으로 일 하다 보면 작은 실수를 할 수도 있다”면서 “금품수수 등의 비리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전 청장은 “김 후보가 발간한 공약집에는 구 재정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장밋빛 공약들이 많은 데, 그중 여성복지지원센터 건립과 교육환경개선사업 예산을 구 재정의 5%대로 올리겠다는 공약은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 묻고 싶다”며 역공을 펼쳤다. 김 후보는 이에 대해 “여성복지지원센터 건립은 이미 시와 협의하고 있는 사안으로 구 재정에 부담을 주진 않을 것”이라며 “중앙의 불공정 행정이 적발돼 국비와 시비까지 반납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해도 교육예산을 5%대로 올리는 것은 문제도 아니다”고 답했다.

전 청장은 모두 발언에서 “반평생 공직생활과 구청장 4년 동안 100여 개가 넘는 크고 작은 상을 타는 등 이미 검증을 모두 거쳤다”며 “항간에 ‘여성구청장 한 명은 나와야 한다’는 말이 있지만, 구청장은 특정 성(性)을 배려하는 자리가 아니라 행정을 정확히 꿰뚫어보는 행정전문가가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민주화의 성지 광주에서 여성단체장이 한 명도 나오질 않았고, 서민과 약자를 대변하는 민주당에서도 전국적으로 여성단체장을 배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엄마가 아이를 키우는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행정을 이끌어 광주가 자랑할 만한 여성구청장이 되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지도부 비판한 의원 지역구만 공천 양보”

민주 중진 의원들 야권연대 비판...긴급대책회의 요구

민주당 내 4선 이상의 중진 의원들이 6·2 지방선거 야권연대와 관련해 당 지도부에 쌓인 불만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전정배, 김영진, 문희상, 이석현, 김성순 의원은 23일 오전 여의도 한 호텔에서 조찬회동을 갖고 정세균 대표에게 야권연대와 관련한 긴급대책회의를 소집해줄 것을 건의하기로 했다. 또 긴급대책회의는 당 상임고문과 4선 이상 의원들로 구성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 의원은 이 자리에서 “공교롭게도 타당에 양보한 지역구를 보면 당 지도부에 비판적인 의원들의 지역구가 포함됐다는 의문이 있다”며

“이에 대한 해명이 있어야 하고 협상의 원칙·기준도 논의해야 한다”고 강하게 문제제기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또 “야권연대가 위기를 맞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 당 소통이 전혀 없는 상태”라고 당 지도부를 질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석현 의원은 이날 일선상 사정으로 맡고 있는 당직을 모두 사임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야권연대에 대해 쓴소리를 했다.

이 의원은 “범야 시민사회와 민주당에 대해 쓴소리를 하자면 야권연대는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며 “첫째로 개혁세력의 한 축인 진보신당의 노회찬, 심상정 후보가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에게 그대로 나온다고 하는데, 이것이 제대로

야권연대라고 할 수 있겠느냐”고 일갈했다.

이 의원은 이어 “양보를 한다 해도 상대방에 유력한 후보가 있을 때 검토할 수 있는 것인데, 우리가 양보하기로 나왔던 경기도 구역에서는 후보가 없어서 후보를 구하려 다닌다고 한다”면서 “서울 어느 지역의 경우 한나라당 후보 하던 무명 인사를 위해 어떻게 당선 가능성이 큰 우리 구청장을 양보할 수 있는냐고 항변하고 있다”고 비판을 계속했다.

이에 대해 한 주류 측 인사는 “협상 과정에 대한 당내 소통을 문제삼는 것은 사실상 협상을 하지 말자는 것”이라며 “양보 지역에는 이른바 주류 측 인사가 지역위원장으로 있는 곳도 적지 않다”고 반박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광주·전남 국회의원 곧 ‘국비확보’ 회동

‘국비예산 확보를 위한 광주·전남 정치권의 노력 부족’<본보 3월23일자 1면 보도>에 대한 지적과 관련, 광주·전남지역 단체장과 국회의원들이 내년도 국비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민주당 광주시장 김동철 위원장은 23일 “광주시 측으로부터 내년 예산과 관련된 정보를 받은 것이 없어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도 “이번 주 금요일(26일) 광주지역 국회의원들과 만나 국비예산 확보 문제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여당의 경우 현 상황에서도 정부 부처와 협조하며 지역예산을

확보할 수 있지만 야당으로서의 어려움이 많다”면서 “하지만, 단 한곳이라도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 정치권이 단체장과 국회의원들이 내년도 국비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민주당 광주시장도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많은 예산 확보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정부 예산안이 확정되기까지 나아가 예산국회에 철저히 대비하라”고 지시했다.

민주당 전남도당 김홍석 위원장은 “도당위원장 취임 이후 2~3차례 지역의원들과 회동했으며 이 자리에서 정치적 문제뿐 아니라 지역현안 문제도 상당부분 논의했다”며 “정부 부처의 예산안 심의

에 맞춰 전남도와 지역 국회의원들이 긴밀하고 효율적인 공조 체계를 구축, 국비 확보에 총력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전남도당 김영록 수석부위원장은 “갑자기 중앙부처에 예산을 요구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니까 국회에서는 나름대로 할 일을 미리미리 챙겨,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을 성숙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박준영 전남지사도 이날 “내년도 현안 예산을 파악하기 위해 시·군 순시를 연초부터 서둘러 끝마쳤다”며 “이를 바탕으로 관련 부처·지역 국회의원들과 긴밀히 협조, 국비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무안 오사카 직항

JIN AIR

광주MBC 문화탐방

예약문의 : LAND BANK(랜드뱅크)여행사 | TEL: 02-2211-0000
 광주점 : 02-2211-0070, 02-2211-3335 FAX: 02-2211-0000, 02-2211-0009